

여성정책 국내동향

2019년 4월 1차 (2019.4.1~4.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주요 현안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선고**

- 여성가족부 등은 정부합동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금일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국가인권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에서 낙태한 여성 등을 처벌하는 위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인정한 데 대하여 환영하고, 이번 결정이 그동안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를 바꾸어 자기결정권을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힘

참고자료

- [헌법재판소 보도자료, 2019.04.11]
<https://www.ccourt.go.kr/cckhome/kor/ccourt/pressrelease/selectPressrelease.do>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1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05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9.04.11]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currentPage=1&menuid=001004002001&pagesize=10&boardtypeid=24&boardid=7604015>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는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2,500명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일반 특성) 평균연령 43.1세, 대다수가 이혼 한부모(77.6%) 평균 1.5명의 자녀 양육
- (소득) 월평균소득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 대비 절반 수준
- (경제활동) 한부모 84.2%는 취업 중, 상용근로자 비율 증가 등 고용안정성 다소 개선
- (주거) 전·월세 비율은 줄고 공공임대 입주자는 늘어남. 주거지원 정책 인지도 향상됨
- (자녀양육) 초등학교생 자녀 돌봄교실·방과후 교실 이용비율이 높아짐(47%→53.9%)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11]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302

- **(정부정책)** 정부 지원을 받는 비율은 계속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12년 30.4% → '15년 41.5% → '18년 46.0%)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및 교육급여 대상 확대 영향으로 보임
- **(양육비 이행 현황)** 78.8%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고, '12년 대비 '한 번도 받은 적 없다'는 감소(83.0%→73.1%), '최근까지 정기지급'은 증가(5.6%→15.2%)
-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48.5%), '미이행자 처벌 강화'(29.9%),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역할 강화'(20.1%) 순

아이돌봄서비스 긴급 전수조사 등 아동학대 예방 대책 강화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서울시 금천구에서 발생한 아이돌봄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으로 인해 해당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동 돌봄미 활동 기간 중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힘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02]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87

개방된 '열린채팅방' 내 불법촬영물 유포도 점검단속한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열린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촬영물 유포와 불법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 실시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3.29]
http://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6283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개설

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봄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창구를 4월 8일(월)부터 6월 30일(일)까지 개설·운영

참고자료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9.04.08]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bSeq=&aSeq=373801&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구분	계류법안 (발의자)	제안일	내용
가족· 돌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1인)	2019- 04-01	부가 혼인 외 자녀에 대하여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비혼부의 출생신고를 용이하게 하도록 함. 또한 현행법은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고 제출받은 증명서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필요한 정보수집을 방지하고 사용 목적외 사용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개인 정보의 보호 강화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2019- 04-01	대단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019- 04-04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원을 두도록 하여 구조와 체계를 통일하고 재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활성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2019- 04-0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보다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세연의원 등 17인)	2019- 04-10	정부가 조사한 표준보육비용 등을 공표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로 하는 보육비용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보육비 등이 표준보육비용보다 낮게 책정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적으로 보육의 질이 하향평준화하는 우려 차단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보라의원 등 15인)	2019- 04-11	아이돌보미 채용 시 아이의 부모에게 인적사항, 범죄이력, 돌봄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2019- 04-15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고, 여기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반영

건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등 10인)	2019-04-15	「형법」의 낙태의 죄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임신 22주 기간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기존 사유에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더하여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확대하고, 임신 14주 이내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 없이, 임신부의 판단에 의한 요청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가능하도록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5인)	2019-04-15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 도모
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2019-04-08	현재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2019-04-08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0인)	2019-04-08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보육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
젠더 폭력· 안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등 11인)	2019-04-0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2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마약류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관의원 등 14인)	2019-04-01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등인 경우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는 검사가 예외 없이 친권상실신고 등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그 예외가 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일부 제한의 선고를 법원에 반드시 청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가해자의 친권 행사 가능성을 차단 또는 제한하여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0인)	2019-04-08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자 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입학, 재입학, 전학 등을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의 지급 금액은 피해자 등의 생활수준, 경제적 손실, 지출 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정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 이외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고통을 경감시키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2인)	2019-04-12	동법 제56조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참고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육관련 지도자, 교육관련 공무원 및 그 외 훈련지도담당사 등을 신고의무대상에 추가하여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의 책임의식 및 경각심 제고

조사결과·연구내용 인용

구분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링크
임신중단(낙태)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 조사	2019.04.11	한겨레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388
	2019.04.11	한겨레	[사설] '여성' 보호할 때 '태아 생명'도 보호된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89705.html
	2019.04.11	쿠키뉴스	국내 낙태 1년에 5만건...사후관리받은 여성 절반도 안 돼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89705.html#c_sidx9da954e5c256d709f436f67d312534c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방안	2019.04.01	여성신문	'불법촬영의 나라'...처벌 사각지대, 피해자 두 번 운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651466

연구자 인터뷰/대외발표

연구자명	보도일	매체명	헤드라인	링크
박선영 선임연구위원	2019.04.11	한겨레	낙태죄 사실상 비범죄화...“66년 만에 여성시민권 보장받아”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889733.html
김동식 연구위원	2019.04.12	KBS	“14주까지낙태전면허용”첫법안발의...‘산넘어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9130&ref=A
	2019.04.11	연합뉴스 TV	한국도 '낙태허용국' 대열에...OECD4개국만 금지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411015900038/?did=1825m
	2019.04.12	중앙일보	임신몇주까지낙태허용?의사들은“12주~16주가능”	https://news.joins.com/article/23438263
	2019.04.11	KBS	“14주까지낙태전면허용”첫법안발의...‘산넘어산’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9328&ref=A
강민정 부연구위원	2019.04.14	세계일보	“엄마로 살기 힘들어요”...육아휴직 불이익 여전 [이슈+]	http://www.segye.com/newsView/20190414507331?OutUrl=naver
정성미 부연구위원	2019.04.12	한국일보	취업전선 뛰어드는 여성 늘고... ‘그냥 쉬는’ 남성 역대 최고치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411696767769?did=NA&dtype=&dtypecode=&prnewsid=
김정혜 부연구위원 김정혜 부연구위원	2019.04.11	KBS	“깊은 유감” “역사적 진전”...종교계-여성계 엇갈린 반응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8580&ref=A
	2019.04.11	KBS	각계 엇갈린 반응...“여성 인권, 새 역사 쓰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78528&ref=A

유관기관 동향

코호트 완결출산율 분석 결과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코호트 완결출산율의 하락은 비혼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무자녀 부부의 증가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 대응 전략이 합계출산율 회복에서 ‘삶의 질 제고’로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진바, 출산에 대한 희망과 현실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 [보건·복지 Issue&Focus]
https://www.kihasa.re.kr/web/publication/periodical/issue_view.do?menuId=50&tid=38&bid=21&aid=464&ano=1